20대 대통령선거 후보에게 보내는
대한민국 7대 인권 의제에 대한 국제앰네스티 질의서

■ 취지

새로 선출될 대통령은 장기화하는 판데믹 상황에서 그 누구의 생명과 안전도 배제하지 않도록 인권을 고려한 방역 지침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 긴급 대응으로 유예되는 시민의 권리, 특히 사회경제적 취약층의 권리 보호를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2022년 대한민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에게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증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선출될 차기 대통령은 한국의 국제 인권 의무 이행을 공개적으로 약속해야 합니다.
다음은 국제앰네스티가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권고하는 차기 대통령이 최우선 과제로 해결해야 할 일곱 가지의 인권 의제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각 후보에게 7대 인권 의제에 대한 입장과 추진 의사를 묻고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 후보자의 인권문제 해결 의지를 듣고자 합니다.

■ 질의서 답변방법

국제앰네스티의 7대 인권 의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입장은 첨부문서 〈대통령 후보자에게 보내는 7대 인권 의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 문서를 확인하시고, 각 인권 의제에 대한 추진 의사가 어느 정도인지 아래의 표에 밝혀주십시오. 또한, 국제앰네스티의 입장과 이견이 있거나, 각 인권문제 해결에 대한 후보자의 추가 공약, 내용 또는 입장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재해 주십시오.

■ 답변 마감일

2022년 2월 13일(일) 24:00까지

■ 답변 공개방법

보내주신 답변 내용은 시민들이 각 후보의 인권 정책과 인권 문제 해결 의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입니다.
후보자의 답변은 국제앰네스티 웹페이지(amnesty.or.kr), 소셜미디어(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며, 응답하지 않은 결과도 사유와 함께 공개할 예정입니다.

■ 담당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유지연 캠페인팀 간사 (jiyoun@amnesty.or.kr, 070-8672-3394)

1. 성소수자(LGBTI) 권리 보호 및 차별 종식

국제앰네스티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인터섹스(이하 'LGBTI')의 권리를 보호하고 차별을 종식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고 적용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자는 국제앰네스티의 요구사항에 공감하고, 아래의 내용을 추진할 의사가 있습니까?

	추진	일부 추진	추진 불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성징 등 다양한 이유를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			
군대 내 남성간 성관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할 것			
성별정정 시 정신과진단, 강제적인 불임시술이나 성기재건술과 같은 의학적 치료, 혼인하지 않은 상태나 미성년 자녀가 없을 것과 같은 폭력적, 차별적 조건을 요구하지 않을 것. 또한 성별정정이 개인의 자기선언에 기초하여 신속하고 접근 가능하며 투명한 행정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할 것			
다양성과 포용을 촉진하고 LGBTI 권리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할 것			

국제앰네스티의 요구사항과 이견이 있거나 성소수자(LGBTI) 권리 보호 및 차별 종식 관련 추가 공약사항이 있다면 상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여성인권과 젠더 평등 증진 및 온라인 젠더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보장

국제앰네스티는 여성인권과 젠더 평등 증진 및 온라인 젠더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한국 정부에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고 적용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자는 국제앰네스티의 요구사항에 공감하고, 아래의 내용을 추진할 의사가 있습니까?

	추진	일부 추진	추진 불가
유해한 성 고정관념과 같은 여성 차별의 동인을 제거해 성 평등을 촉진할 것			
여성의 정의 회복과 범죄 신고, 적극적인 사법 절차 참여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수립할 것, 또한 정의 회복을 호소하는 여성에 대한 보복이나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온라인 젠더폭력이 국경을 넘어 자행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등 민간 부문에 모든 형태의 폭력과 차별 근절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촉구할 것			
국제인권법 및 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동의 여부'를 중점에 두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의 정의를 수정할 것			

국제앰네스티의 요구사항과 이견이 있거나 여성인권과 젠더 평등 증진 및 온라인 젠더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보장 관련 추가 공약사항이 있다면 상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후정의 달성

국제앰네스티는 기후정의 달성을 위해 한국 정부에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고 적용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자는 국제앰네스티의 요구사항에 공감하고, 아래의 내용을 추진할 의사가 있습니까?

	추진	일부 추진	추진 불가
기후위기가 인권의 위기임을 인정하고, 한국의 인권 의무와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목표에 부합하도록 즉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상향할 것			
탄소중립, 넷제로(Net-zero emissions)가 아닌 '탄소배출제로(Zero emissions)'를 달성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재수립할 것			
늦어도 2030년까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특히 석탄 발전을 포함하는 모든 화석연료의 사용을 긴급히 단계적으로 철폐할 것			
기후변화와 탈탄소화 과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노동자 및 지역사회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을 보장하고, 모든 과정에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존중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			

국제앰네스티의 요구사항과 이견이 있거나 기후정의 달성 관련 추가 공약사항이 있다면 상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북한 인권 증진

국제앰네스티는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한국 정부에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고 적용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자는 국제앰네스티의 요구사항에 공감하고, 아래의 내용을 추진할 의사가 있습니까?

	추진	일부 추진	추진 불가
향후 한반도에 관한 외교 활동에서 인권 문제가 한국 정부의 핵심 의제로 다뤄지도록 할 것			
한국에 도착한 북한 주민을 박해의 공포가 존재하는 곳으로 강제 송환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관련 법과 규정을 개정, 보완할 것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적 상황과는 상관없이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북한 및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			

국제앰네스티의 요구사항과 이견이 있거나 북한 인권 증진 관련 추가 공약사항이 있다면 상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 존중 및 증진

국제앰네스티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 존중 및 증진을 위해 한국 정부에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고 적용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자는 국제앰네스티의 요구사항에 공감하고, 아래의 내용을 추진할 의사가 있습니까?

	추진	일부 추진	추진 불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완전한 향유를 보장하고, 특히 집회 개최에 유리한 추정을 명문화할 것			
감염병 예방 등을 이유로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제약하는 조치가 있을 경우, 반드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며, 이 조치가 평화적 집회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보장할 것			
국제인권법에 따른 대한민국의 의무에 부합하도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개정할 것. 특히 평화적 집회에 대한 권리 촉진자로서의 정부 당국의 의무 명시를 포함하고, 시민사회 및 법률 전문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해당 법률의 초안 작성, 검토 및 개정 과정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국제앰네스티의 요구사항과 이견이 있거나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 존중 및 증진 관련 추가 공약사항이 있다면 상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존중 및 증진

국제앰네스티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존중 및 증진을 위해 한국 정부에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고 적용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자는 국제앰네스티의 요구사항에 공감하고, 아래의 내용을 추진할 의사가 있습니까?

	추진	일부 추진	추진 불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내법과 제도를 개정하여 국제인권법 및 인권기준과 일치시킬 것			
국가보안법을 개정, 검토 또는 폐지하여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할 것. 국가보안법이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합법적으로 행사하는 이들을 괴롭히거나, 위협하거나, 체포하거나, 기소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를 이유로 부당하게 기소되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들을 무조건 즉각 석방할 것			

국제앰네스티의 요구사항과 이견이 있거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존중 및 증진 관련 추가 공약사항이 있다면 상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사형제 폐지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제 폐지를 위해 한국 정부에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고 적용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자는 국제앰네스티의 요구사항에 공감하고, 아래의 내용을 추진할 의사가 있습니까?

	추진	일부 추진	추진 불가
모든 사형수를 지체 없이 징역형으로 감형하고 사형제도를 법적으로 완전히 폐지하기 위한 입법을 가속화할 것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유보 없이 비준할 것			

국제앰네스티의 요구사항과 이견이 있거나 사형제 폐지 관련 추가 공약사항이 있다면 상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